

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안 미 영**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네덜란드, 독일 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가족정책의 개인화는 네덜란드 및 독일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나라에 비해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현저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분석결과 세 국가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자원에 의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독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이 여성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 즉 응답자의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상대적 자원이나 성역할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은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사회화된 성, 젠더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이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더 중요하게 일하는 기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가족정책, 젠더, 개인화, 무급노동, 경제적 협상, 성역할 인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IA5A01926961)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myan@kookmin.ac.kr)

1. 서론

새천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국가의 가족정책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가족정책의 성격과 정책변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돌봄 기능의 탈가족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An and Peng, 2016). Peng(2004)은 사회적 돌봄의 발전의 원인으로 탈산업화의 인구사회구조적 변화, 여성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나타난 젠더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성단체의 역할, 행정부처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Fleckenstein and Lee(2017)는 2000년대 일본보다 더 확장적이었던 한국 보육서비스 발전의 원인을 정당의 경쟁에서 찾는다.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의 가족정책 혹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성격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상이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탈피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족정책 관련 지표들 살펴보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인 것이 예를 들어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이나 보육서비스 사회지출 규모는 유럽국가와 비교했을 때 남성생계부양자라고 할 정도로 낮지 않다. 반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은 어떤 젠더레짐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연구와 논의들은 제도차원에 머물러 있다. 만약 가족정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입의 정도가 미비한 수준이거나 여성의 돌봄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무급노동 분담이 심각하게 젠더화된 상태라면 제도/정책 차원에서 성격을 분석하고 미시차원의 젠더 관계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정책이 여성을 유급노동자로 가정하고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등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포함하였고 그 국가의 무급노동 분담이 제도적으로 여성고용증진 정도가 낮은 국가에 비해 더 평등하다면 제도차원의 분석만으로 미시차원의 젠더관계에 대한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의 고용증진에 대표적인 일가족양립 정책 중 하나인 보육서비스 중심의 가족정책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이 지속되었다(안미영, 2018). 산업화와 후기 산업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ty) (Chang, 1999)가 지닌 거의 변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이다. 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남성이 사용하는 시간에 3-4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전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비교해도 이렇하고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도 여성의 무급노동 분

담의 수준은 심각하다.

복지국가와 젠더평등 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기준이 되었으며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국가들“로 이분화된 공식이 팽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An and Peng, 2016). 이분화된 공식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이 형성 및 발전되면 노동 분배에서 젠더평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가족정책의 근대성과 미시차원의 무급노동 분담의 심각한 젠더화를 고려하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출된 거시차원의 정책과 미시차원의 젠더관계의 실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시차원의 젠더 관계, 특히 젠더화된 무급노동의 분담을 분석하고 가족정책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로 여겨진 국가들 중 지난 20여년 동안 가족정책을 발전시킨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의(Lewis et al, 2008; An and Peng, 2016) 가족정책 개인화를 논의하고, 무급노동 분담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가족정책과 무급노동 분담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의 실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2. 기존문헌 분석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차원의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자는 경제적 협상력과 성역할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론(다른 표현으로 자원 협상 권력 관점, resource-bargaining power perspective)은 가족 내의 자원 분배를 이타심(Altruism)의 발현이 아닌 협상(Negotiation)의 결과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Blood and Wolfe, 1960). 결과적으로 가족 내 권력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경제적 협상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육이나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획득한 금전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시장성이다. 특히 경제적 의존성 모델은(Economic dependency) (Brines, 1994; Greenstein, 2000)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개인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파트너/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사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가족 내 불평등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가사노동 분담을 두고 남편과 아내 사이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협상의 결과라는 의미이며 주로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무급노동은 여성화 된다고 주장하였다(Bianchi et al, 2000; Bittman et al, 2003; Brines, 1994; Evertsson and Neramo, 2004; Greenstein, 2000).

성역할 인식론은 개인의 인식이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Coverman, 1985). 관련 연구들 중 성역할 인식과 경제적 협상 중 어느 것이 가사노동분담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들은 젠더전시(Gender display) (Brines, 1994), 이탈적 성역할 중립론(Deviant gender role neutralization) (Greenstein, 2000)을 주장한다. 개인의 성역할 인식은 경제적 자원의 협상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Brines는 남성의 경우 배우자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남성보다 더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음을 포착한다. Greenstein은 이 현상이 여성에게서도 나타남을 밝혔는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인 여성은 사회화된 성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여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국내 연구진에 의한 미시차원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학력과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아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젠더전시(Brines, 1994)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성역할 인식이 상대적 소득보다 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은기수(2009)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20-55세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사라졌고 가용시간이 줄어들수록(즉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인식과 상대적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적 소득의 영향은 나타났다. 김소영과 진미정(2014)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25세 44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중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줄었으며 2004년과 2009년에 한해서 부부 소득 중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줄었다. 안미영(2016)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20-59세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학력, 직종, 고용형태)의 상대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의존성이나 절대적 소득량 등 소득 관련 지표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연구진에 의한 기존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의 소득에 의한 경제적 협상이나 성역할 인식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변인의 조작화, 특히 상대적 소득의 조작화가 다양한 결과 한국의 심각하게 젠더화된 무급노동에 대한 미시차원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개인이 자신의 자원에 기반하여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성역할 인식에 기반한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Fuwa(2004)는 1994년 국제사회조

사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차원의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젠더 임파워먼트 인덱스(Gender Empowerment Index)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면서 이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복지레짐을 언급한다. Geist(2005)는 미시차원의 개인이나 가구 수준의 특성으로만 무급노동 분담을 설명할 수 없으며 복지레짐은 국가 간 상이한 무급노동 분담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수조합주의 복지레짐의 무급노동 분담의 불평등도가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지하기 때문이며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젠더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동일임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급노동 분담이 보수주의 복지레짐에 비해 덜 불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젠더평등을 주창하지 않지만 기혼 여성을 개인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자유주의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평등이데올로기의 발현이며 결과적으로 보수조합주의 복지레짐에 비해 무급노동 분담이 더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eist의 연구는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유주의 평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개인화와 사회민주주의식 정책적 개입을 통한 개인화 중 어느 것이 더 무급노동 분담에 긍정적인 함의를 가진 제도적 특성인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의미 있는 함의는 자유주의식이든 사회민주주의식이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준의 체제를 의미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정책의 개인화 정도는 Lewis(1992)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발전하며 특히 여성을 유급노동자로 가정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중요하게 보았다. 수많은 국가비교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였는데 여성고용증진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한다. 초창기 연구가 돌봄서비스 이용율에 의존하였다면(Anttonen and Sipilä, 1996) 최근 연구는 돌봄서비스, 육아휴직 그리고 가족 수당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적절한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갖춘 휴직제도는 여성고용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 Gornick et al, 1997; Jaumotte, 2003; Kleider, 2015; Sainsbury, 1996).

새천년 이후 두드러진 유럽 가족정책의 변화를 두고 서구 학자들이 동일하게 특징으로 삼는 것은 개인화이다 (Mätzke and Ostner, 2010). Lewis et al (2008)은 스웨덴식의 변화는 아니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의 변화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성을 유급노동자로 가정하는 개인화로 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Ciccia and Bleijenbergh (2014)는 보육서비스의 변화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약간의 변화에 그쳤다”는 기존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며 경

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퍼지셋 분석 결과 독일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나타났는데 보육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긴 것을 제외하고는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 공공 사회지출, 육아휴직제도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구성된 젠더레짐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Ciccia and Verloo(2012)는 육아휴직제도 규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퍼지셋 분석을 실시하여 네덜란드는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보편적 부양자 (Unsupported universal breadwinner) 모델이라고 주장하였고 독일은 설정된 젠더레짐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연구는 가족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성격을 보다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젠더관계에 대한 가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보육서비스나 육아휴직제도 분석을 통해 유럽의 2000년대 가족정책 변화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대단한 변화, 즉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Universal carer model)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연구들은 기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주장한 보편적 생계부양자 혹은 보편적 노동자 혹은 성인노동자 모델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에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5모델로의 전환은 결국 기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가족에만 국한되었다가, 부분적이거나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노동시장이라는 공적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족정책의 변화를 개인화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동의가 있는 반면 한국의 변화한 가족정책 혹은 사회적 돌봄에 대해 학자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Peng (2011)은 남성생계부양자 가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친복지적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으며, 여성노동시장참여의 증가는 젠더관계에 대한 가정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유진 외(2016)의 연구에서 한국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분류되었다. 여유진 외는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가족 수당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젠더레짐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국외 연구가 제도의 관대성과 포괄성을 주로 분석에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출수준은 복합지표로서 유용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 한국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독일은 가족수당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지출이 낮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낮은 돌봄 보상모델로 규정되었고, 네덜란드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돌봄서비스가 모두 낮았다가, 2010년 기타로 구분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족정책의 개인화와 무급노동 분담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Geist(2005)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상대적 소득이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한다. Evertsson (2014)은 개인의 성역할 인식이 스웨덴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정책의 개인화가 높으면 젠더 평등한 무급노동 분담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족정책의 개인화가 높을수록 유급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무급노동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Pfau-Effinger(1998)는 정책/제도의 내용이 젠더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중요하나 한 사회의 젠더 관계는 그 사회에 구조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성역할 인식은 사회전반에 팽배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팽배하면 무급노동 분담의 남녀가 차이가 반드시 “문제”가 아닌 것이 여성의 성역할 인식에 바탕을 둔 선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Kremer, 2007). 그러나 개인 본인의 성역할 인식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정책 차원의 개인화는(Orloff, 2002) 인식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시차원의 가구 내에서 개인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이 자신이 유급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을 통해 경제적 협상을 한다면 개인화의 발현이며 그녀가 자신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무급노동을 한다면 그 역시 개인화의 발현이다. Brines(1994) and Greenstein (2001)은 젠더전시적 행태가 사회에서 팽배한 성역할 인식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이 높은데도 상대적 소득력이 낮은 여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 인식에 부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젠더전시이론은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진보적이다 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상대적 소득이 높은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인식은 전통적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가사노동을 더 할 수 있다. 즉 성역할이 상대적 소득의 영향보다 클 때 성역할 인식에 따라 행동한 개인화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화는 개인이 자원과 인식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제도차원에서 개인화와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의 개인화는 여성고용증진정도를 의미한다. 가족정책의 개인화가 높으면 상대적 자원에 의한 경제적 협상력이나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의해 무급노동 분담이 달라질 것이다. 반면 무급노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구조화 된 성역할 “젠더” 그 자체의 영향을 받는다. Iversen and Rosenbluth(2006)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을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설문조사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소득이나 인식과 관련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설문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화된 성, 젠더, 자체가 가지는 영향과 개인의 자원이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급노동 분담에 대해 한국 기혼여성은 상대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협상을 발휘하는가? 또는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인식에 따라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가? 네덜란드와 독일은 어떠할까? 과거와 달리 2000년대 한국 가족정책의 변화는 “젠더평등”,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 “일가족양립” 등 여성과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발전해왔다.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에 상대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협상력과 성역할 인식의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다면 개인이 자원이나 인식을 바탕으로 무급노동을 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상력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변화한 가족정책은 가족 내에서 무급노동 분담에 대해 개인화가 발휘되기 어려운 체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혹은 “젠더” 자체가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난다면 이는 변화한 (정책차원에서 개인화의 가능성을 가진) 가족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구조화된 사회체제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시사한다.

3. 한국, 네덜란드, 독일 가족정책의 개인화

가족정책의 개인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서비스만 가지고 비교 가능하며 (Anttonen and Sipilä, 1996)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서비스, 현금지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Daly and Lewis, 2000; Lewis, 2006; An and Peng, 2016). 이진숙(2008)은 독일의 일가족양립정책을 분석하면서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수준은 긍정적이나 3세 미만의 경우 부정적이며, 휴직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Lewis et al(2008)의 경우 독일 가족정책의 2000년대 변화는 프랑스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길고 관대했던 휴직제도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과 가족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특히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단축을 포함하면서 변화하였다고 지적한다. 3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경우 2006년 33%의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업을 유지한 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수준의 여성의 고용촉진으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은기수 외(2005)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를 지원할 뿐 성평등에는 관심이 없어 일가족양립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보육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이용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Lewis et al(2008)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젠더관계에 대한 가정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육아휴직 역시 미비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에 나타난 변화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역할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종전부터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장/고용주의 역할이 지속 발전되었다. 또한 현금지원을 골격으로 한 개인화는 시장중심형 보육서비스 체제나 본인이 임금을 저축하여 육아휴직을 길게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을 분석한 전윤정(2015)은 김대중 정부 시기 본격적으로 제도형성이 시작되면서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로의 잠정적이나 경로 이탈이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재가족화 방향으로 경로의존적 회귀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An and Peng(2016)의 연구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한국의 돌봄정책은 2000년대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돌봄 기능의 탈가족화로의 경로 전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낮은 임금 대체율을 그 특징으로 하여 시간 가족화는 대만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며 반면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2010년 즈음,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서의 성격이든 가족에 대한 수당으로서의 성격이든, 매우 낮아 현금지급을 통한 가족화 역시 낮았다고 지적한다.

2010년 즈음 한국, 네덜란드, 독일 가족정책의 개인화 정도는 어떠할까? 기존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율, 육아휴직제도, 가족수당을 살펴보자. OECD 가족데이터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의 경우 한국은 2000년 0.1%에서 2013년 0.9%로 증가하고 독일은 0.3%에서 0.6%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독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000년 0.3에서 2013년 0.7%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 53.9%에서 2014년 55.9%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2000년대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대대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독일의 경우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증가하였고, 한국은 11.2%에서 35.7%로 증가하여 독일보다 이용률이 더 높았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 중 임금 대체된 기간(Full rate equivalent paid parental and prolonged leave)은 2013년 기준 한국 16.9주, 독일 21.4주, 네덜란드 4.8주였다. 가족수당의 경우 독일은 2000년 GDP대비 1%에서 2013년 0.8%로 감소하고 네덜란드는 동기간 0.7%에서 0.6%로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기준 0.1% 수준이었다.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당은 여성의 개인화를 저해하는 제도라는 기존 주장을 반영하고(Jaumotte, 2003; Kleider, 2015; Sainsbury, 1996), 소득이 대체된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Thévenon and Solaz, 2013),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이 높을수록 여성고용증진이 높다는 주장에 따르면(Jaumotte, 2003; Stadelmann-Steffen, 2011) 한국 가족정책의 개인화정도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미비해 보이지 않는다.

4. 한국, 네덜란드, 독일의 무급노동 분담 실태와 원인

1) 데이터, 측정변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네덜란드, 독일의 20세이상 64세 미만 응답자 1,5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이다. 국제사회 조사는 응답자와 배우자/파트너가 가사노동에 할애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와 배우자/파트너가 할애한 시간총량 대비 여성이 할애한 시간의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높을 수록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이 비율이 높은 즉 불평등한 분담을 의미하였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엄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자녀에게 해롭다”, “여성이 전일제로 일을 하면 가족 생활이 어려워진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다”, “일하는 엄마는 일하지 않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를 포함한 5개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는다 4)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를 포함한다.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의미하였다. 국제사회조사는 파트너/배우자 중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은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응답범주는 1)내 배우자(파트너)는 소득이 없다 2) 내 소득은 배우자(파트너)의 소득보다 훨씬 높다. 3) 내 소득은 배우자(파트너)의 소득보다 높다. 4) 우리의 소득은 비슷하다. 5) 내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은 내 소득보다 높다. 6) 내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은 내 소득보다 훨씬 높다. 7) 나는 소득이 없다. 를 포함한다. 여성 응답자의 응답을 리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경제적으로 독립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상대적 소득 보다 큰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Brines, 1994) 상대적 소득과 그의 제곱값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국제사회조사는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는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정보와 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심각하게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수준이상(1)과 이하(0)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연령과 자녀수를 포함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화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서베이 응답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응답자의 성별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국제사회조사는 미취학자녀와 취학이상 17세 이하자녀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는 두 정보를 합하여 자녀수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이중 근로여성만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포함한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47.5세, 50.2세, 47.1세로 나타났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한국의 경우 37.7%, 네덜란드 46.5%, 독일 45%로 나타났다. 한국이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2.8)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각 3.6, 3.7로 한국에 비해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혼여성이 가장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2.6), 네덜란드와 독일은 2.8로 한국보다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의 경우 25.8시간, 네덜란드는 18.5시간, 독일은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일하는 기혼여성 중 대학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전체여성의 비율에 비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한국, 네덜란드, 독일 모두 전체 여성에 비해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소득의 경우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상대적 소득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한국은 46.8시간 네덜란드 27시간 독일 26.8시간으로 나타나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네덜란드나 독일의 보다 1.5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샘플

	한국		네덜란드		독일	
	전체 여성 (634)	일하는 여성(343)	전체여성 (460)	일하는 여성(305)	전체 여성 (499)	일하는 여성(322)
연령	47.5/9.6	47.2/9.0	50.2/10.0	49.2/9.9	47.1/10.3	47.1/9.3
교육수준	37.7%	37.3%	46.5%	51.2%	35%	40.4%
성역할 인식	2.8/0.7	2.9/0.7	3.6/0.8	3.8/0.8	3.7/0.9	3.9/0.8
상대적 소득	2.6/1.6	3.4/1.4	2.8/1.3	3.1/1.2	2.8/1.4	3.1/1.3
평균 주당 근로시간	25.8/27.6	46.8/19.9	18.5/15.4	27.0/10.8	17.6/16.3	26.8/12.4
자녀수	0.8/1.0	0.8/1.0	0.8/1.1	0.8/1.1	0.9/1.0	0.8/1.0

2) 분석결과

(1) 기술분석

<표 2>는 한국, 네덜란드, 독일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76.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이 72.4% 네덜란드가 69.7%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의 경우 한국 73.6%, 독일 70.5%, 네덜란드 67.6%로 나타났다.

<표 2> 한국, 네덜란드, 독일 20-64세 기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

	한국	네덜란드	독일
전체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	76.7	69.7	72.4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	73.6	67.6	70.5

(2) 회귀분석

<표 3>은 한국, 네덜란드, 독일 무급노동 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무급노동 분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무급노동 분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이 진보적일수록 무급노동 분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전시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과 무급노동 분담율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여성 응답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무급노동을 분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된 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상대적 소득과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무급노동 분담율의 정도는 응답자의 성에 의해 달라지는 정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성역할 인식과 상대적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무급노동 분담율이 낮아졌고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낮은 분담율과 관련이 있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젠더 전시적 행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응답자의 성별은 무급노동 분담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화된 성역할의 영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인식에 따른 변화정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화된 성의 영향력이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소득과 인식에 의한 개인화가 무급노동 분담에 주요하게 영향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상대적 소득과 응답자의 성별의 영향이 나타났다.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여 분담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된 성 역시 네덜란드 및 독일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성역할 인식에 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과 상대적 소득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0.935로 나타나 네덜란드와 독일에 비해 더 사회화된 성에 의해 무급노동 분담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상대적 소득의 제공값이 무급노동 분담율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 소득이 매우 낮은 여성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여성에 비해 무급노동 분담율이 더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네덜란드, 독일 모두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무급노동 분담이 더 평등해지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무급노동 분담이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독일, 네덜란드 모두 응답자의 성별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사회화된 성, 젠더, 그 자체로 요구되는 무급노동의 분담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하게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표 3〉 한국, 네덜란드, 독일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		네덜란드		독일	
	B	S.E	B	S.E	B	S.E
(상수)	80.615***	4.989	80.996***	4.368	78.443***	4.204
연령	0.148	0.127	-0.048	0.094	0.083	0.085
교육수준	-2.189	2.024	-1.925	1.695	-1.621	1.77
근로시간	-0.079	0.045	-0.19**	0.061	-0.142	0.058
상대적소득	-3.467***	0.724	-2.767**	0.811	-1.526*	0.635
상대적소득 ²	-0.699*	0.347	0.227	0.337	0.367	0.311
자녀수	0.852	1.156	0.202	0.869	0.972	0.88
성역할인식	-1.961	1.325	-4.038***	1.044	-2.366*	1.009
응답자의 성별	4.402*	1.841	7.301***	1.624	4.346*	1.706
R ²	0.079***		0.209***		0.095***	
Durbin-Watson	1.87		1.979		1.923	

*p<0.01 **p<0.05 ***p<0.01 ****p<0.001

<표 4>는 한국, 네덜란드, 독일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은 상대적 소득과 젠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여 무급노동을 줄이지만 사회화된 성, 젠더 자체에 의해 무급노동 분담이 주요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달리 <표 4>에서 상대적 소득의 제곱변인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대적 소득력이 높은 여성에 비해 낮은 여성이 덜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하는 경우는 전업주부이거나 은퇴할 경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추후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은 그들의 성역할 인식에 의해 무급노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소득과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에 의해 줄었다. 사회화된 성에 의해 무급노동 분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자원과 인식의 영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소득력이 높거나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이면 무급노동 분담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된 성에 의한 영향은 나타났지만 미약한 수준이었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일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높은 기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대적 소득력이 낮은 기혼여성에 비해 더 평등하게 무급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행태를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 한국, 네덜란드, 독일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		네덜란드		독일	
	B	S.E	B	S.E	B	S.E
(상수)	75.364***	7.334	85.000***	5.741	82.813***	5.257
연령	0.231	0.189	-0.029	0.109	0.096	0.107
교육수준	-2.026	2.963	-1.781	2.087	-0.005	1.963
근로시간	-0.085	0.069	-0.263**	0.097	-0.173*	0.087
상대적소득	-3.493***	0.931	-2.952**	0.932	-2.798**	0.812
상대적소득 ²	-0.095	0.572	0.266	0.569	0.949 [†]	0.449
자녀수	0.206	1.643	0.235	1.095	1.662	1.065
성역할인식	-0.739	1.824	-4.671***	1.332	-4.032**	1.255
응답자의 성별	6.755 [†]	2.625	7.947***	2.003	3.278+	1.962
R ²	0.057**		0.187***		0.143***	
Durbin-Watson	1.98		2.097		2.044	

[†]p<0.01 *p<0.05 **p<0.01 ***p<0.001

5. 논의 및 결론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례는 여성의 고용증진을 통한 개인화의 정도가 높은 가족정책은 여성 친화적이며 정책이 여성 친화적이면 미시차원의 젠더 관계도 평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해 왔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가족정책을 변화시킨 한국, 네덜란드, 독일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세 국가 가족정책의 여성고용증진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여성고용 증진정도는 네덜란드와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이 여성고용을 저해한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고용 증진정도가 네덜란드나 독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무급노동 분담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보다 더 평등한 수준의 무급노동 분담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네덜란드, 독일의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사회화된 성 “젠더”의 영향은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자원과 인식의 영향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화된 성에 따라 무급노동 분담율이 달라지는 정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무급노동 분담이 가장 불평등하게 나타났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인 분석 결과 한국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사회화된 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이는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의 일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사회화된 성에 의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의 자원과 인식에 의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사회화된 성, “젠더”에 의한 영향은 미비하게 나타났고, 자원과 인식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가족정책차원에서의 여성고용증진정도로 분석한 개인화 정도와 미시차원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가 기존 연구가 제시한 가설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가족정책이 여성 고용증진에 함의하는 개인화 정도는 네덜란드나 독일에 비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의 현실은 그 정도가 심각하며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더 불평등하다.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에서 사회화된 성에 따라 무급노동 분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개인화에 대한 상당한 함의를 지닌 가족정책이 있으나 여전히 사회화된 성에 따라 무급노동 분담이 주요하

게 달라지는 사회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수단의 여성 고용증진에 대한 함의와 미시차원의 젠더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복지국가와 젠더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제도의 개인화와 함께 미시차원의 젠더관계도 개인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주요한 분석 과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가족정책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탈피하였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정책수단 차원에서 보면 한국 가족정책이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거시와 미시차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국가 비교연구가 요청되며 특히 본 연구는 정책 수단차원의 여성고용증진(개인화) 이외 미시차원의 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수준의 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할 필요를 남긴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로 사회를 발전시켜온 네덜란드와 독일이 이제 여성 개인이 자신의 자원과 인식을 바탕으로 무급노동을 분담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거시차원과 미시차원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론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젠더 평등한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및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 김수정, 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소영, 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이진숙(2008). 독일의 일-가족 양립정책에 관한 연구-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8(3), 165-190.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_____, 전광희, 윤희식, 김수정(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4-40.
- _____(2017). 자원의 상대성과 가족 내 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 한국 유급노동자 부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4(1), 83-102.
- _____(2018). 가족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복지동향*, 235, 10-1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여유진, 김영순, 강병구, 김수정, 김수완, 이승윤, 최준영. (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연구보고서 2016-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윤정. (2015). 탈상품화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3), 179-218.
- An, M. Y. & Peng, I. (2016). Diverging paths? A comparative look at childcare policy in Japan, Korea and Taiwa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0(5), 540-558.
- Anttonen, A. & Sipilä, J.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 Batalova, J. A. & Cohen, P. N. (2002). Premarital cohabitation and housework: Coupl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43-755.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lo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Family Living*, Oxford, England: Free Press Glencoe.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 of Sociology, *100(3)*, 652-688.
- Ciccia, R. & Bleijenbergh, I. (2014). After the male breadwinner model? Childcare services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Politics*, *21(1)*, 50-79.
- Ciccia, R. & Verloo, M. (2012). Parental leave regulations and the persistence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us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o assess gender equality in an enlarged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5)*, 507-528.
- Chang, K. S.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198.
- Gornick, J. C.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n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_____, & Ross, K. E. (1997).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Policy variation across Fourtee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1)*, 45-70.
- Evertsson, M. (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 _____. & Nermo, M. (2004). Dependence within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labor: Comparing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72-1286.
- Fleckenstein, T. & Lee, S. C. (2017). The politics of investing in families: Comparing family policy expansion in Japan and South Korea. *Social Politics*, *24(1)*, 1-28.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eist, C. (2005). The welfare states and the home: Regime differences in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1)*, 23-41.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Iversen, T & Rosenbluth, F.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Explaining cross national variance in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and the gender voting ga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1)*, 1-19.
- Jaumotte, F. (2003).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ver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7,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Kleider, H. (2015). Paid and unpaid work: The impact of social policies on the gender division of

- labour,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5), 505-520.
- Kremer, M. (2007). *How Welfare States Care: Culture, Gender and Parenting in Europe*. Amsterdam University Press.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_____. (2006). Employment and care: The policy problem, gender equality and the issue of choic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8(2), 103-114.
- _____, Knijn, T., Martin, C. & Ostner, I. (2008). Patterns of development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in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in the 2000s. *Social Politics*, 15(3), 261-286.
- Mätzke, M. & Ostner, I. (2010). Introduction: Change and continuity in recent family polic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5), 387-398.
- Orloff, A. (2002). Gend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s: An unfinished agenda. *Sociological Theory*, 27(3), 317-343.
- Peng, I. (2004). Post industrial pressures, political regime shifts, and social policy reform in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3), 389-425.
- _____. (2011). The good, the bad and the confused: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are expansion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Change*, 42(4), 905-923.
- Pfau-Effinger, D. (1998). Gender cultures and the gender arrangemen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ross-national comparisons on gender.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1(2), 147-166.
-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évenon, O & Solaz, A. (2013). *Labour Market Effects of Parental Leave Policies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1, OECD Publishing.
- Stadelmann-Steffen, I. (2011). Dimensions of family policy an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alyzing group-specific policy effects. *Governance*, 24(2), 331-357.

Abstract

Individualization in Family Policy and Gender Division of Unpaid Work in Germany, Netherlands and South Korea

Mi Young An*

This article analyzes individualization of family policies and gender division of unpaid work in Germany, Netherlands and South Korea. Measured in terms of women's employment promotion, the individualization at the policy level was greater in Korea than both Germany and Netherlands. However, married women's share of unpaid work was substantially larger in Korea than Germany and Netherlands. The strong unequal division of unpaid work was also the case among working married wome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hare of unpaid work in Korea was related to relative income in all three countries. But while gender ideology was positively related to married women's share of unpaid work in Germany and Netherlands, the relationship was not found in Korea. Gender of respondent was also an explanatory factor for all three countries. The influence of married women's relative income and gender ideology on share of unpaid work was similar to or larger than the effect of gender of respondents in Germany and Netherlands. By contrast, it was gender of respondent that mattered most for married women's share of unpaid work in Korea. Among working married women, we found that both relative income and gender ideology were related to differences in share of unpaid work in Germany and Netherlands which was either similar to or larger than the effect of gender of respondent. However, we found that gender of respondent mattered most in Korea.

Key words: Family policy, gender, individualization, division of unpaid work, relative income, gender ideology

◆ 2018. 07. 31. 접수 / 2018. 11. 12. 1차수정 / 2018. 12. 19. 게재확정

* Associat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myan@kookmin.ac.kr)